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16일 (금)
제 26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2. 언론, 마녀사냥 견어치워라
3.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범의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유지담 대법관 등 5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린 것"이라며 "대법원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실망스럽지만 입법부를 통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여지를 남긴 것은 고무적"이라며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한해 700여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 대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반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답답히 털어놓았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범의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언론, 마녀사냥 견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러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 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 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은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권권을 침해 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 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위원장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거나, 조작·프락치 공작의 피해를 받았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권위주의 군부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탄지를 걸고 있다"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무슨 큰 일이 난 듯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군 씨는 "반민특위가 연상되는 상황"이라며 "마녀사냥으로 의문사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편집자주] 1일부터 16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에이즈 회의의 참관기를 2회에 걸쳐 실는다.

"나도 여러분의 우려에 깊이 동감한다"며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씨가 15차 국제에이즈대회의 빈약한 인권의식을 지적했다. 로빈슨 씨는 "대회 기간 동안 인권을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우려하며 "HIV/AIDS에 맞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접근은 인권에 기반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이번 국제에이즈대회는 글로벌 펀드와 WHO의 3+5(2005년까지 300만 명에게 치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한 내용만이 주를 이루면서 '돈과 과학의 이야기 잔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이레네 칸 사무총장은 "왜 인권에 기반 한 HIV/AIDS 확산저지와 치료에 대한 접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은 "감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인권유린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빈민, 여성,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마약사용자 등 빈번하게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들이 주로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는 점도 왜 HIV/AIDS 문제에 인권의 시각이 통합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감염인과 고위험 그룹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HIV/AIDS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 그러나 공공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HIV/AIDS 문제는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이며, 인권의 시각 없이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HIV감염자와 AIDS환자는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직장에서 강제적인 의무 검사 △감염인에 대한 해고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의 제한 등 노동권 박탈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마약사용자 감염인의 경우, 경찰의 폭력과 고문·학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태국정부가 작년부터 발동시킨 '마약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주노동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염인으로 판명될 시 즉각 강제 추방되고, 심지어 비자신청에 HIV/AIDS검사를 의무 조항으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HIV/AIDS를 도덕적 타락으로 접근해 감염인이 국가의 위신을 하락시켰다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없다는 국가도 있다. 이레네 칸 사무총장 역시 중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 정부가 작년 처음으로 중국 내의 HIV/AIDS에 대한 보고서를 냈지만, 감염인은 끊임없이 탄압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방콕에서 국제에이즈대회가 진행

되는 동안 중국에서 4명의 HIV양성반응 농민활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에이즈 고아들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ACT-UP 등 HIV/AIDS 활동가 단체들은 방콕 현지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조직했다. 태국감염인네트워크의장은 "이처럼 공공보건과 안전의 이름으로 감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HIV/AIDS를 도덕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면 할수록 마약 사용자 등 고위험 집단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더 큰 위기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지난 1년 동안 국가별 자문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IV/AIDS 인권 권고안을 발표했다. 건강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공동체참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성이라는 원칙 아래 각국 정부가 감염인과 여성, 수감자,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마약 사용자 등 고위험 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준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검사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검사를 금지할 것 △감염인 이주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것을 금지할 것 △비자 신청시 검사의무조항을 삭제할 것 △섹스워커(성산업 종사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그들의 직업을 존중해줄 것 △감염인과 고위험 집단들이 HIV/AIDS와 관련된 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에이즈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감염인의 건강권을 요구하며 미국을 필두로 G7과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비난과 항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시위대는 콘돔 사용보다 순결을 강조하는 에이즈 예방정책을 국제원조의 조건으로 내거는 미국 행정부에 항의하여 미국 대통령자문위원 토바이어스의 강연장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연설을 중단시켰다. 또한 시위대는 캄보디아 등 저개발국에서 비감염인, 여성, 섹스워커 등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실험하여 감염에 노출시킨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아드의 부스를 붉은 페인트로 뒤덮었다. 뒤이어 파이자, 로쉬, 에봇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부스들도 희생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페인트로 얼룩지며 박살났다. 이런 시위와 항의는 한국의 나누리+를 비롯한 에이즈활동가들이 조직하고 있으며, 이들은 민중의 의료접근권을 획득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엄기호 팩스로마나 동아시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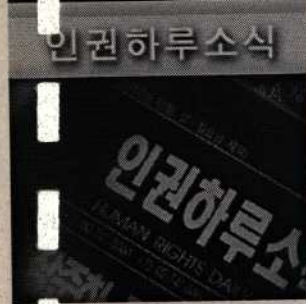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0일 (화)
제 261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2.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3.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전향 장기수에 대한 복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왜곡 및 과장으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제3기 의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참 논의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중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복송 권고 기사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색깔 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

위법한 전향공작에 죽음으로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전향공작이 폐지되고 준법서약으로 바뀌었다가 그마저도 아예 폐지된 이상 그들의 행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행동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전향 장기수 또한 이러한 강제적인 전향공작에 따른 선택이 많았을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경우에 복송시키는 것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장본인인 국가의 도리라는 권고이다.

게임이 아니다

허원근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조단과 의문사위원회 사이의 공방을 보는 태도만 해도 그렇다.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국가기관간의 진실게임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는 의문사위원회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피조사기관인 국방부 특조단의 반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조사관들을 권총(또는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수갑을 채운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명백한 저항일 뿐이다. 여기서 그것이 가스총이었던지 권총이었던지, 인 상사가 조사관들을 '긴급체포'하려 한 것인지 여부 또한 피조사기관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드러난 색깔론

또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의 운동권 전력을 들어 '간첩·사노맹 출신' 운운하는 중앙 일보의 보도는 이러한 일련의 색깔론 공세의 절정을 이룬다. 채용 이전에 모두 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신원조회까지 거쳐서 채용된 이상 과거의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게다가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들도 또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거나 그 피해자일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아무리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이라고 해도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색깔론이라는 전가의 보도에 다시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마련일터다. 마침 의문사위원회가 일부 사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색깔론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청산이 없이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20세기 이후 어두운 과거를 가졌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반민특위의 와해로 일제청산도 실패하고, 이제 권위주의 청산의 상징이 된 의문사위원회마저 보수세력의 색깔공세 속에 그 전도가 불투명해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왜곡과 호도를 뚫고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이 현재 위기에 처한 의문사위원회를 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정치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기사 처음으로>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케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동조합 등 전국 5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주5일제 쟁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케도연대 공동투쟁본부(아래 케도연대)'는 △신규인원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 △새로운 교통체계 지속시행 반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자 1천 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주5일 노동제'를 본격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인 지하철 현장에서는 아직도 주5일제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인원 충원 없는 주5일제 실시는 노동강도 강화만을 초래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는 이용자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케도연대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케도연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정부에서 추진·제정한 '청년 실업해소특별법'을 들어 주5일제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의 공백을 신규인원 채용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5일제 실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케도연대는 "각 공사, 공단 경영진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신규인원은 채용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생체리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악하거나 비정규직 확대, 민간 위탁·용역 도입, 휴가제도 폐지 등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지난 7~8년 동안 신규채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천621명이 감원되었다.

지난 5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쟁의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2.4%에 71.5%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됐다. 6월 3일부터 공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케도연대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운행시간준수투쟁'에 들어갔다. 다른 사업장의 연대활동도 이어져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열차증편계획 거부와 안전운행투쟁 등의 방안을 확정했고,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파업 시 대체인력 동원지시 거부'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16일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케도연대와 함께 '케도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케도산업공대위)'를 발족했다. 케도산업공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1. 의문사위에 판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 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사위, 정연관 사건 '인정' 결정...정씨, 87년 군부대 내 부채자 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에 불복중한 이유로 구타당해 사망(7.14)/ 중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라며 규탄성명 발표(7.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헌법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5명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충의견 제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 수송 저지 위해 도로 막고 시위 벌여(7.12)/ 전교조 소속 1만6,638명 교사들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과 서화·제마 부대의 조속한 복귀' 촉구 시국선언 발표(7.13)/ 파병반대국민행동,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라크파병 반대를 위한 철야결의대회 진행(7.14~15)/ '이라크 파병반대 부산시민평화행동', 이라크에 파병될 자이툰 부대가 사용할 군수물자를 선적하고 있는 부산항 제 8부두 입구에서 인간띠 잇기 벌여(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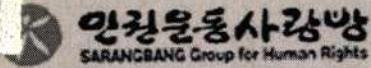
4. 기타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애청 전 회장 한대용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자,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강의석 학생과 종교재단 소속 학생3명 교내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7.1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1일 (수)
제 2618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2.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잡아주세요?
 3.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4.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조국 통일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대일 사무처장은 집행유예 결정사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01년 결성된 한청은 청년단체로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강령이나 소식지에서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반미 등을 주장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집행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또 "한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북의 통일방향과 동일한 주장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청이 전국적 조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를 들었다.

이적단체 규정에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난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날 재판에 기대가 모아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근 한대웅 씨 관련 대법원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인권하루소식 2004년 7월 14일자 참조> 그러나 한 씨(민애청) 사건도 1, 2심에서 '북한의 주·주장과 유사한 점을 이유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가 대법원이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무엇인지 따지면서 원심판기에 이르렀다.

한청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적단체 판결은 사법부에 의한 중세기 마녀재판"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맞느냐, 과연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고 개탄했다. 전 의장은 "휴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문명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문명사회일 것"이라며 "검찰 공안부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문명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 특별위원회 권오현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이런 재판 놀음을 끝장낼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잡아주세요?

펜 발목 때문에 한동안 견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어리석게도 내가 아파 봐야 남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지, 우리사회에서 '이동권'을 향유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통중에 비례하여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하철에 있는 그 무수한 계단들, 눈 디딤기 만한 버스 승차대를 마구하면서 '무표정' 한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감춰진 '폭력'을 읽는다면 지나친가?

며칠 전, 행사준비로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현수막 가게를 가던 중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계단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나는 당연히 현관 1층에서 승강기로 발길을 옮겼다. 아깝사! 승강기에는 '절전을 이유로 2층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게 아니던가. 할 수 없이 그 건물 2층에 위치한 현수막 가게를 가기 위해 계단 손잡이에 몸을 의탁해 계단을 오르고 내렸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2층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승강기 2층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장애인'임을 전제로 한 발상이어서 씁쓸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상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승강기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신부 등 흔히 이동약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수단에 자의적인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애초 승강기는 자기 역할의 반쪽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승강기는 2층까지 거뜰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층부터 승강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건물 앞 계단 옆에 각아절뿔한 급경사로 만들어 놓은 길이 '조형물'인지 '휠체어 이용길'인지 헷갈리는 상황. 절전한다고 운행하지 않는 승강장 옆에서 계단만 밀똥똥똥 쳐다봐야 하는 현실. 편의시설은 장식물이 아니다. 품으로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 앞에 다 시금 '이동권'이 무색할 따름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세계에이즈회의가 16일 태국 현지에서 폐막됐다. 소나 간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이 폐막을 장식하는 동안, 세계 에이즈 활동가들 역시 활동과 투쟁을 결산하며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Health Gap, 프랑스의 Act U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TAG 등은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미국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이윤이 아닌 생명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국의 에이즈 치료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태국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미국과 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 △부시 미 행정부는 미 정부기관에서조차 실패를 인정한 미국대통령 에이즈 긴급구호계획 대신 글로벌 펀드를 통해 지원할 것 △미국과 G7은 글로벌 펀드에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펀드를 파산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것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용자들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른 한편 100여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중의 의료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폐막에 맞추어 지난 1년 간 준비해 온 'HIV/AIDS 민중현장'을 발표했다. '민중의 의료운동'은 현장 전문에서 "건강은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인권의 문제"이며 "불평등과 가난, 착취, 폭력 그리고 부정의가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의 뿌리"라고 규정, "HIV/AIDS는 사회·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개발과 민중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공적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HIV/AIDS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인권협약과 인도주의협약에 근거를 둔 민주주의와 민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은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HIV/AIDS에 의해 한 세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음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전쟁, 내전이 공공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중에게 HIV/AIDS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서 HIV/AIDS와 관련한 인권 부분이 빠져있음을 비판하며, 이런 보건의료 양성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의 의료운동'은 민중과 운동단체, 보건의료인, 정부, 제약회사,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UNAIDS가 해야 할 일을 명기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였다.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등이 △HIV/AIDS로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난 저개발국의 모든 부채를 즉각 탕감할 것 △공공의료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할 것 △스카피약 생산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없앨 것 △HIV/AIDS 치료와 확산저지를 위해 제공되는 돈은 빚으로 제공될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HIV/AIDS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과정을 초국적 자본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제적인 공적 기관을 통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반부 초점의 윌튼 벨로는 방콕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하여 "에이즈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이 초국적 제약회사에 맡겨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제를 생산하기보다 특허권 방어에 더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아 그라를 위해서 특허권을 지키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꼬아붙였다. 다만 "생명이 걸린 필수약품에서 특허권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윌튼 벨로는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적 수준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이나 UNAIDS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의 윤 가브리엘 대표도 "세계에이즈회의가 인권과 민중의 목소리에 기반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면서도 "Act Up, TTAC 등이 운동을 계획, 조직하는 방식을 눈으로 직접 보고 동참하며 네트워킹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표는 '우리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말한 토바이어스의 말을 언급하며, 그러나 "사실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아니라 비싼 에이즈 치료제 때문에 죽어간다"며 "저지되어야 할 적은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엄기호 파스로나나 동아시아활동가]

<기사 처음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해·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해·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노조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5일 김에란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노조원 1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약속했던 '손해·가압류'라는 칼날을 휘둘러 노조를 상대로 12억6천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급속노조는 산별 협상에서 '손해·가압류 금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대병원노조 이송아 상황실장은 "합법 파업에 대한 병원측의 손해·가압류 조치는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립병원이 앞장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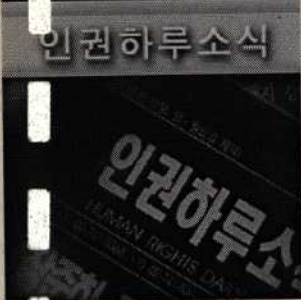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2일 (목)
제 2619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췌기
 2.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을
 3.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4.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췌기

송두을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 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을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 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의 내용을 검토해보건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가 외국인인 점,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인 선출이나 공표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북한 조 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저술활동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 여부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저작물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에 편향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전체 저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국가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라며, 특히 "그 저술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김일성 장례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김경일에게 편지를 보내고, 통일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참가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불러오고 현시기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송 교수를 '자유정신과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 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 안전, 안보에 대한 위협은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유죄가 되고,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교수 재판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각계에서는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 하듯 몰아붙였던 1심 재판을 시정할 매우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타협적 결론을 맺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도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김선일과 송두울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 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울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정을 두고 말이 많다. 테러범들에 대한 굴복이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철군 결정은 정당하다는 평도 전해졌다. 철군 결정과 이에 따른 인질의 석방을 바라보는 미국과 필리핀의 시각이 어떻게 간에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인의 마음은 착잡하다. 역시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되었던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 문제도, 파병의 정당성 문제도 적어도 언론의 관심에서 거의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전해진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철군 결정과 그에 이은 인질 석방 소식은 결국 김선일 씨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선일 씨의 피살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정부가 신봉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김선일 씨를 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서 명분 없는 전쟁과 완전히 손을 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 호기롭게 파병강행 확인 방침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이쯤 되면 근거 없는 국익론이나 동맹강화를 내세워 파병을 강행하려는 이 정부와 그것을 강요하는 미국 자체가 대량살상무기가 아닐까?

파병동의안을 낸 대통령(정부), 그것을 가결시킨 국회, 파병결정이 통치행위라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려야 할까?

이와 비교해 보면 송두울 교수 항소심 판결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조그만 희망이다. 비록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정치적 후보위원 부분과 송 교수의 저술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송 교수의 귀국 후 구속과 전향 강요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산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파산선고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느낌이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조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 파산선고의 길을 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행여 대법원이 또 한번 파산선고를 미룬다 해도,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덩다. 1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라고 한다.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이 여름도 정말 시원해지지 않을까?

◎ 김중서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전국 4개 도시의 지하철노조가 2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측은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번 파업은 인력충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공식적인 지하철 사고만 85건으로 투신자살이 58건, 추락이 9건"이라며 "출입문에 끼거나 부딪치는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또 잦은 사고로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중 주요한 하나가 '1인 승무제'라고 주장했다. 한번에 3천여 명을 태우고 달리면서 한꺼번에 1천여 명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을 단 1명의 기관사가 운행하도록 한 것이 '1인 승무제'이다. 서울시는 아이엠에프 때 직원 3천277명을 줄인 데 이어 2007년까지 2천773명을 더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를 도입하면 인력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계다가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동자 3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았고, 노동자들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공황장애'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업에 참가한 서울지하철 차량지부의 한 노동자는 "산재로 인해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인력확충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가 시민들에게 안전이 걸린 문제이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있어선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동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는 실질적으로 파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직권중재에 반발해왔다. 실제로 직권중재 제도는 그 동안 사용자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폐지를 거듭 권고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혀온 직권중재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며 막판 실무협상을 통해 애초의 요구였던 '현 정부의 30% 인력충원'에서 한발 물러나 '16% 인력충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사측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65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5일제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린 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하고 있다.

매번 반복되었듯, 언론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시민의 발을 불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하철은 공공 수단인데 공사측이 기업논리를 내세우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1일 오전 당내 의원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에서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로드맵(아래 로드맵)'이 제시돼 국회의 안팎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준비모임은 "대체입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흡수되는 완전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지향하는 당내 흐름이나 개폐에 동의하는 야당과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으로써 국가보안법 개폐를 17대 국회의 '역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31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내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8월 3일 국가보안법 폐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8월 20일까지 공론 형성 및 입법조사활동을 벌이고,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을 나타내면서도 폐지 흐름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국가보안법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자세는 아주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의원, 한나라당 내 동조 의원들과 전격적으로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고, 56년 동안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호창 변호사는 "대개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불안한 상황을 우려하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느냐, 어떻게 국회 내에서 야당과 합의를 이루어내느냐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요 관건이다.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힘들지 않다. 그런데 야당과 보수세력의 공세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구체적 전략·전술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에서 구속자 양산이라는 의형적인 피해와 함께 내면화된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었던 세월동안 우리 국민에게 주입되고 강요당한 이분법적 논리, 자기검열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기사사 내 공안관련 기구의 대폭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이 기존 형법 등 다른 법률로의 대체가능성을 비교·검토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3조~12조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고, 특히 형법 1장 '내란의 죄'와 2장 '외환의 죄'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므로 처벌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5조2항(금품수수)와 10조(불고지)의 경우 처

벌공백이 생기지만, 이 규정은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동안 반인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해도 처벌공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당장이라도 국가안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처벌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끝장내기 위한 전략 토론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열린우리당 내 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3일 (금)
제 2620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압박과 고립으로 북 인권 개선 안돼"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3.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4.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압박과 고립으로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당)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이제 미국 상원과의 조정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이에 대해, 22일 인간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북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북한인권법안의 기본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 인권법안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핵 6자 회담 등 이미 진행 중이며, 북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인권·평화단체들 역시 "북의 인권과 민주화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 법안은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되어야 함은 마땅하지만, 법률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북 주민들에게 절실한 인도적 원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제3장은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평화단체들은 "탈북 유도는 북 체제 붕괴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의 식량 부족과 경제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 75쪽 /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소수의 입을 통해서만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잘못을 잘못이라 말한 한 고등학생의 용기가 지금까지의 침묵과 얼룩진 양심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정보자료실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글들과 판례를 묶어냈다. 자료집에는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쟁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관련 판례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사립대 채플 의무 수강'이 쟁점이 된 사례여서 사립 중등학교에서 강제되고 있는 종교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인간의 본연적 자유인 신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들을 이 자료집은 제공하고 있다.

하승수·김진 변호사는 "사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에 대한 교육은 원하는 학생에게만 제공되도록 하고,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의 지침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학교 안에서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다. 박복선(전 우리교육 편집장)은 말한다. 강요된 종교교육으로 "아이들은 종교의 위선을 알아차릴 것이고, 기회주의적 처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런 유치한 종교에 치를 떨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도 없고 교육도 없고 결국은 신도도 없는 것"이라고.

관련 판례에는 '대학'의 채플 의무 수강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98년 대법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76년 대법 판례, 이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기사 처음으로>

삼성노동자 또다시 위치추적 사실 드러나

인권단체, "추악한 노동자 감시, 삼성그룹이 진상 밝혀야"

삼성 SDI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우와는 달리(인권하루소식 7월 14일자 참고), 퇴사한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후 번호를 본인 몰래 이용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삼성 SD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사한 이 모 씨는 2003년 8월 경 휴대전화 요금에 이례적으로 많이 부과돼 휴대전화업체에 문의하자, 휴대전화업체 직원으로부터 "친구찾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자세한 확인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200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25회에 걸쳐 9명의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치추적 당시 이 씨 휴대전화의 발신지역이 모두 지난해 밝혀진 바와 같이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노동자들 중 8명은 삼성 SDI 수원 혹은 부산 공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1명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노동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노조 결성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해고·퇴사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및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9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인권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조직적인 노동자 감시를 자행해왔다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기보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의 연달아 요청을 거부해온 삼성그룹은 이날도 기자회견단의 항의서한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기사 처음으로>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실천에 함께 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던 22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출발에 나선 전상봉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 의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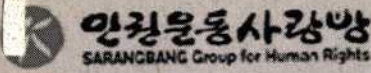
56년 국가보안법 역사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청년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 못지 않았다.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의 사람들과 만나 국가보안법에 대해 토론하고 폐지를 알려나겠다는 의지에 숙연함마저 든다. 22일 서울 여의도를 출발하여 안양,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제주, 마산, 창원, 울산, 충주, 파천을 거쳐 다시 9월 5일 국회로 돌아오는 1,350여km 대장정에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며 '이적단체 규정의 모순성'을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4명이 참석한 이날 도보순례는 지역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알리는 촛불 문화제, 하루 걷기 대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지역부문운동단체들의 결합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9월 5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제1차 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 1백만인 청원 운동을 이미 거리, 학교, 사업장,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22일 도보행진 참여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중인 민경우 씨 부인 김혜정 씨와 아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혜정 씨는 "가족을 감옥에 둔 사람으로서 하루 빨리 남편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도보행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북 서로의 화해를 위해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인데 징역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올해 내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4일 (토)
제 26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2.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3.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4. 성림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민애청 사건을 판결하면서 '명백한 위험성'을 갖대로 판단한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향후 법원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20일 서울지법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검찰이 15일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5년을 구형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법부의 일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으로는 그 폐해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있었던 개정 시늉에는 뼈아픈 분노를 느낀다. "운용상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인권침해를 존속하고 남북긴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률 무슨 국가안보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처럼 거짓 주술을 걸어대는 것은 변화된 시대를 역행하고 수구냉전체제로의 회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소아 온 총과 같다. 총에 총알 몇 개 없앤다고 그 총의 총구 앞에서 쓰러지는 이가 없겠는가. 더 이상 개정론이나 대체 입법론을 들먹이지 마라.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기사 처음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대신,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제강점학개정동원피해자진상규명, 삼정교육피해자 명예회복및보상 등 과거사 청산 관

런 10여개의 법안들을 시기, 성격 등으로 구분해 2~3개 통합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둘 경우, 의문사위원회 조사활동의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합의가 발표되자,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진상조사 포기 결정"이라고 분노하며 "중대한 개혁의 후퇴이자 참으로 야비한 책임회피 방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업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의문사의 가해 당사자들이 넘쳐나는 한나라당'이 과연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문사위원회 일체의 활동은 가해 당사자들의 간섭과 방해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간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최근 한나라당이 의문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반대하고 위원회 폐지를 운운하고 나서니까, 의문사위원회를 존속시키는 법 개정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분개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정치세력들의 공방과 타협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개혁성은 물 건너 갈 테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역사적 과제를 털어 버리려는 꼴수를 당장 중단하고, 현 의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과 3기 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실험보조원과 조리종사원, 일용영양사, 사서 등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맺게 됐지만, 실제로 이들은 일하는 날에 일당을 포함한 총금액을 방학기간이 포함된 개월수로 나눠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경우 보협액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월평균 40여 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월평균 50여 만원이다.

이에 지난 2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교육청별로 진행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 상용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는 7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박했다. 이날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이부민 사무국장은 "학교 내 상시업무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일당 계산이 아닌 연봉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용직화의 중단 단계 정도로 보았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10여 만원의 임금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부민 사무국장은 "연봉제를 처음 따냈을 때 올해 과학실험보조원에게는 8백8십9만원, 조리종사원에게는 7백9십2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6월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일년이 안된다며 중도계약으로 인정하여, 이 기간 내 일하는 날 수에 일당 3만2천3백30원을 곱한 것을 총액으로 한 후 8개월로 나눈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약속했던 연봉제라면 조리종사원은 월 66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은 월 74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가 중도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리종사원은 56여 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은 64여 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치졸하게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지부 김현숙 지부장은 "시력 저하,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노동자에게 양주 한 병 값도 안 되는 한달 월급 50여 만원을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낸다"고 비판 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호소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정부정합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부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성림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8일자 참고)

1997년 ~ 2000년까지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했다는 전모 씨는 "1997년엔 요양 시설에서 아이들이 맞아죽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해 5월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이틀 동안 구타를 당해 결국은 숨졌다"며 "직원들이 그 아이를 잠도 깨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단에서는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대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혜요양원에서만 165명의 장애인들이 죽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매년 10월 ~ 3월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전체의 80%에 이른다"며 "이는 대부분 겨울 추위로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혜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는 "살인적인 추위로 유명한 칠원에서 한겨울에 하루 1시간만 난방을 했다"며 "겨울에도 찬물로 아이들을 목욕시켜야 했고 아이들이 밤새 추위에 떨다가 동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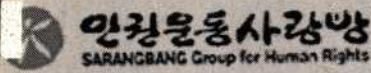
강제노역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현재 서울정신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 씨는 "요양원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하루에 14시간씩 농사일을 시키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 동원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그들은 월급 4만원 중 담배, 음료수 값 2만2천 원을 뺀 1만8천 원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람공대위는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요청했다.

한편, 성람재단 소속 은혜요양원, 문혜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6월 22일부터 매일 감사원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시설내 인권침해를 알리는 집회를 열고,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을 지나 성람재단 사무실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해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7일 (화)

제 26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 2. "총이 아닌 밥"
- 3.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4.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 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적발 신고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까지 했다. 법무부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 작전'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대표는 "지금과 같은 단속추방으로는 1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용허가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무엇이든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양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방침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편견을 부추길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서 이들을 고용한 기업주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 기업주의 신고를 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원천봉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사회의 음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아시아의친구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숙련된 이주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다수 고용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침이며, 단속추방의 두려움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7만9천명 정도의 신규인력 유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금지 등의 독소조항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단속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양혜우 대표는 단속·추방과 같은 실효성도 없는 정책 끝에 '대국민 신고' 홍보까지 나서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단기적 대응을 비난하며 "현재 국내 거주하는 16만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총과 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파병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등 43개 인권평화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

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원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낭비되어 수많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주국방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인권평화단체들은 "국방부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9조5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0.7% 감소했다. 사회복지 재원 확보는 결국 군축을 통해 국방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 이후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망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부시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규모의 군비증강에 기반을 둔 군사주의적 접근은 미국에게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고착화시켜 막대한 군비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고 군축-평화체제 구축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인권평화단체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어머니의 소원은 한결같다. 때론 각박한 세상살이에 그 소원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때때로 무게중심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어머니의 이뤄지지 못한 소원은 평생을 짓누르는 한이, 우리 가족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

둘째 언니를 낳고 1년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언니가 뇌성소아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 없고, 항상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언니에게 죄스러워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더욱 힘겹게 했던 것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언니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학교 입학이 거부당했고, 2년간의 특수학교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다. 언니를 일반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수치스러운' '애원'을 마다하지 않았고, 생활의 여유는 모두 포기해야 했다. 어머니의 억척으로 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의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언젠가 혼자 서야 할 언니를 위해 더욱 더 많이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소원은, 마음으로나마 자유롭게 걷고 싶었던 언니의 꿈은 '교육현장'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했으며, 학령기(3~17세)의 장애인 24만 명 중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 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수학급의 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나' '학업포기나'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장애교육에 대한 빈약한 투자는 더욱 빈곤한 부모들의 주머니를 강탈한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며, 함께 교육받고 성장하는 통합교육은 너무 요원한 꿈일 뿐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장애를 가진 인간을 '인격체'가 아닌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때론 사회의 치부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킨다. 또한 '역경을 딛고선' '인간승리'라는 수식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성공의 당락은 마치 가족과 장애를 가진 이들이 쥐고 있는 양 떠들어댄다.

내 어머니의 이뤄지지 못한 소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배우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는 단식농성이라는 외침으로 오늘로 22일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복도 한켠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정상'이라는 인식 앞에, '효율'과 '경제'라는 미명 앞에 철저히 짓밟혀 온 장애인들의 몸부림치는 절규가 어디 22일이라!

이번만큼은 승리하기를,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유해정님은 인간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1. 노동자 파업 부르는 '주5일제'

노동부, 전국 4대 도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7.20)/ 궤도연대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기도 1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주5일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7.21)/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며 44일 동안 진행된 서울대병원노조 파업 종결(7.23)

2. '국가보안법, 사라질 그날' 멀지 않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집행유예 석방/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 명, "8월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밝혀(7.21)

3.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7.20)/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직권중재 철폐 △주5일제 도입 △이라크 파병 반대 요구하며 삭발·무기한 단식농성 돌입(7.21)/ '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저지를 위한 10만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7.23)/ 전쟁피해자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라크 파병반대 도보행진' 출발/ 2차 만민공동회,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청와대 인간 띠 잇기...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7.24)

4. 당신의 정보인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 주민번호 요구'에 대해 정보인권침해 조사(7.1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요구 시, 통신업체는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결정(7.21)/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추가로 드러나...피해 노동자들 삼성 관계자 7명 고소(7.22)

5. 기타

유엔, 이스라엘 분리장벽 철거안 채택(7.20)/ '2004 복인권법안' 미국 의회 하원 통과...국내 인권사회단체, "압박과 고립으로 복인권 개선 안된다"며 반발(7.21)/ 열린우리당-청와대-정부, 의문사위 국회 이관 추진...인권사회단체, "의문사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 교육부 시행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오히려 '연봉감소·퇴직강요' 초래/ 은행권 노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순차적 전환에 합의(7.2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8일 (수)

제 26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안방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2.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3.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쫓겨나기 싫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여 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7일 교육부와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농성단 해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자행되어 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부 특수교육보전과장, 교원복지심의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2005년까지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에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에 우선 특수학급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안이었던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단식농성을 벌이며 내걸었던 7가지 요구안을 교육부가 100%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최소한의 학급 설치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및 예산 확보 등 교육부의 약속이 과연 얼마만큼 이행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교육부총리를 믿으며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합의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춘천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교육감 간담회 및 장애학부모, 특수교사, 장애당사자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26일 서울에서는 전국순회투쟁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형수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약속을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나 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식농성은 장애인교육권 운동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현장에서조차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방치됐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우체들의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사 처음으로>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국내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상담이 일본원폭전문학사단에 의해 이뤄지

면서, 한국원폭 2세환우들이 일본정부를 향해 치료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나가사키 원폭직접자병원, 나가사키 방사선 연구소 등 일본원폭전문 의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합천을 방문, 한국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건강상담을 받은 원폭피해자들은 70명으로 이들은 모두 원폭1세대이고, 이번 건강상담은 일본 나가사키현 '일본국의 피폭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국원폭2세환우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구해온 한국원폭2세환우와 한국원폭피해자 가족 등 15명은 21일 나가사키현 원폭피폭자대책과 담당공무원인 스쿠와 토루 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폭2세환우인 김형을 씨는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한국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쿠와 토루 씨는 "계획에 없던 한국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건강상담은 실시할 수 없으며, 일본에 들어가 향후 '국의피폭자 지원사업'에서 한국원폭2세환우도 포함할 수 있는지 후생노동성에 문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6월 15일 한국원폭2세환우와 원폭2세환우공대위는 나가사키현 국외피폭자 지원사업에 한국원폭2세환우들도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요망서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건강상담은 국내 담당기관인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검토를 요청했고, 원폭피해자2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폭피해자2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김형을 씨에 따르면 합천에서 건강상담이 이뤄지는 동안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형을 씨는 "국민을 대신해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통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48개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일본원폭2세들에게 1년에 두 번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쿄도와 카나가와현에서는 일본원폭2세들에게 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원폭2세 중 '원폭후유증'으로 인정되는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59년 동안 외면으로 일관해온 한국정부, 그 뒤편에 숨어있는 일본정부를 향한 한국원폭2세들의 눈물겨운 싸움이 더 이상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이들의 외침에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합의에 실패한 '도하개발의제(DDA)'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아래 WTO) 일반이사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도하개발의제는 칸쿤에서 열린 WTO 5차 각료회의에서 협의,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이경제 열사의 죽음 등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2001년 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무역체제'에 합의하며 '도하개발의제'를 채택, 농업·서비스·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이 제기된 이래, WTO 각료회의는 전세계 반세계화 시위대의 저항에 직면하며 민중의 반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제출된 협상틀 1차초안('오시마 초안')을 보면,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덤핑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간별 관세 감축방식'을 택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은 관세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또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NAMA)에 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문서('데르베스 문서')가 또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면화보조금 철폐와 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7일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과 'WTO 일반이사회 규탄'을 주장하며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주노총, 전농,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등은 "선진국들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결국은 전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는 "빈곤을 세계화하는 제국주의적 약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내단체들과 일본의 '탈WTO 풀뿌리 캠페인 실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이 △자국의 농업 및 식량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파괴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도상국의 농업을 시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식량안전보다 농산물 무역의 확대를 우위에 둔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농업의 대규모화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각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량 생산은 부차적인 것이 되며, 흙·물 등이 상품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내에서는 쌀 개방이 철저하게 진행돼 농민들이 농업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중들은 세계 곳곳에서 수입된 식량을 소비함으로써 안심하고 식량을 먹을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세계최대의 생산력으로 미국형 생산, 유통 방식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다국적기업"이라고 주장하며 'WTO 농업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에 공동성명을 전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내에서는 WTO 협상의 문제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대표는 "정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윤의 논리에 맡기는 것은 생명을 상품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WTO 협상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WTO 협상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목살 당했다"며 "어제 외교통상부 차관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지만, 외통부는 국회에 입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회도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WTO-도하개발의제 협상-한-일자유무역 협정-한-미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9월 10일 이경해 열사 1주기를 계기로 WTO 반대, 우리살 지키기를 내걸고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29일 (목)
제 2624 호
발행처 : 인간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2. '의문사위, 국회의원관 안될 일'
 3.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4. <알림> 31일 '평화가장행렬'에 참여합시다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전쟁피해자, 전국도보행진 5일째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전쟁의 고통이 삶 전체를 관통해왔던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베트남전쟁피해자들 이 온몸으로 전쟁의 잔혹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뜨거운 7월의 오후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걸었다.

도보행진 5일째인 28일 2시 광주 도청 앞 십씨 33도의 기온 속에 "파병을 하려거든 우리를 밟고 가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따가운 햇빛과 아스팔트의 열기로 연신 땀을 흘리는 이들은 파병을 반대하며 전국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전쟁피해자들과 시민, 학생들이다. 이날 이들은 광주에 있는 전쟁피해자 20여명, 남충원 학생 30여명과 함께 광주도청에서 금남로, 중앙로를 거쳐 광주역까지 행진했다.

태평양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85세의 이금주 할머니는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피나는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우리 손자벌 되는 사람을 또 죽이지 말라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령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운데 걸으니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더 이상 전쟁으로 죽는 것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걸었다"고 답했다. 또 "전쟁이란 세상에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슬프고, 잔인한 일이며 씻을 수 없는 피로움"이라는 이금주 할머니는 몇십 년 전 전쟁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은 '전쟁의 의미'를 털어놓았다.

태평양전쟁 때 강제 동원된 전쟁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전쟁이라면 아직까지 무섭고 겁부터 난다"며 말문을 열었다. "부산에서부터 5일째 더위 아래 걷느라 많이 지쳤다"면서도 "힘들지만, 정부가 또 우리 같은 전쟁피해자를 만들려 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희생자 만드는 것을 즐기느냐?"며 정부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94세의 할머니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도보행진에 참여해 함께 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광주에서 이날 행진에 참여한 최순덕 할머니는 "전쟁이라는 것을 직접 당해봐서 알지만,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난다.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오히려 "마음이 너무 절절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도보행진에 참여해서 망가지고 쓰러져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죽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보행진을 준비하고 함께 해온 변상철 도보단 행동대장은 "전쟁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전쟁이라는 가장 큰 폭력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지 지켜왔다"고 밝혔다. 변 행동대장은 정부가 '국익' 운운하는 것에 대해 "태평양전쟁 때 일본 우익들이 '대동아가 다 잘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의 전장에 밀어 넣었다"고 말해 '국익'의 허울을 뒤집어 쓴 전쟁의 추악함을 폭로했다.

도보행진단은 지난 24일 부산을 출발한 후 경산, 대구, 거창을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한 학살지를 둘러보고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한편 시내를 행진하며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여왔다. 앞으로 익산, 대전, 천안, 평택 등을 경유해 31일 서울에 도착, 국회와 열린우리당을 거쳐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도보행진단은 31일 11시 서울 영등포역에서 시작하는 서울행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 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와 동조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국회에다 의문사위원회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이 안영근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3차 법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국회로 이관할 것이면 법개정을 그만 두라"고 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나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몰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은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서 해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일이라서 현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찌 들으면 진짜 억울소리"라며 "과거 독재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할 현 정부의 정체성을 과거 정부와 연속성에서 찾느냐"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둘러서면 의문사진상규명도 친일청산도 다 물 건너가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지 않으며 계속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며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영근 위원장은 "소속은 어디에 두든지 의문사위원회의 권한과 시한, 범위를 확대 강화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빼겠다는 의지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의문사위원회 활동은 국회에서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겨우 만들어졌고, 그것도 애초 요구한 것의 10분의 1정도밖에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의문사위가 국회로 가면 진상규명은 끝"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면담에 참석한 유가족들 역시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이관은 진상규명 포기"라며 과거청산과 관련해 수구세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면돌파를 촉구했다.

면담에 앞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 민주화의 척도를 가름할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을 수구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당당히 맞설 것으로 요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죽어도 있어도 없는 듯 외면당 하는구나/ 절대로 죽지 말라/ 성매매가 없어지는 세상 이 올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말라" 죽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종이옷을 입은 채 진행된 정고을 씨의 진혼무에 이어 추모사가 낭독되었다.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연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전국 60여 개 여성단체가 함께 준비했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유 없이 십 수명 희생되었다면 이렇게 전국민이 조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회적으로 유린된 삶을 살아야 했던 성매매 여성들은 죽음 이후에도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실제로 이번 연쇄살인사건 희생자의 반 이상이 성매매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폭력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전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 송경숙 소장은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구매자와 업주, 알선업자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지만 이러한 폭력은 항상 감추어져 왔다"고 밝혔다.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여성은 차별과 피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끊임

없이 여성을 유입시키는 성산업 구조에 의한 피해자"라며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이번 연쇄살인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찰측은 "제보한 (출장마사지) 업주가 불법 유탁행위와 관련돼 있다라도 연쇄살인범 검거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성매매 업주는 선불금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이들과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권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쇄살인은 취약계층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향한 폭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고통에는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영기적인 가해자의 행적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지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이 다시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산업형 성매매 업소의 근절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31일 '평화가장행렬'에 참여합니다

일정 : 영동포역(11시)→ 열린우리당사(12시)→ 국회(2시)→ 마포대교
→ 공덕로타리→ 신촌로타리(4시)→ 시청 앞 광장→ 광화문

파병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몸짓을 보여주세요.

△검은 양복입기, 검은 천 두르기, 차도르 쓰기 △부시, 블레이, 노무현 등 전범 가면 쓰기 △악기(없으면 피티병, 깡통 등)를 들고 연주하기, 춤추기 △파병반대 바다 페인팅 △파병반대 공 굴리기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30일 (금)
제 26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 하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과거청산 따지거는 한나라당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3.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4.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5. 법원, '동성애 사실은 인정 못해'

과거청산 따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따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게 과거청산 의지를 전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저지 움직임에 맹비난을 퍼붓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욱정 회장은 "의문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데, 그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현 의장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거울"이라며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역행하는 이런 논의는 당장 견어 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평행하던 색깔론을 들먹이며 과거청산을 위한 활동을 발목잡고, '야당 죽이기'라며 호도한다"고 비난하고,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한나라당은 정치적 술수로 국민적 분노와 통탄을 짓밟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시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타협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과거청산을 저지하려는 세력과 맞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극단의 형벌』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지은이: 스킷 터로/ 옮긴이: 정영목/ 펴낸곳: 교양인/ 266쪽/ 2004년 7월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

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당초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안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은 피해자는 죽었는데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사형은 제도의 이름을 빈 살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양 극단을 오가며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스콧 터로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 분노나 종교적 신념 등의 안개에 가린 사형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미국 연방검사와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2000년 3월 일리노이주가 설치한 사형개혁 위원회에 참여해 2년간 조사활동을 벌였던 경험이 이를 가능케 했다.

저자는 사형 존치론자를 도덕적으로 단죄하지도, 살인범이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가 죽들이 겪는 공포와 슬픔의 영속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저자는 사형제도가 가진 수많은 약점들을 짚어내고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자는 조심스럽게 되묻는다. 흉악한 범죄가 불러일으키는 비애와 분노가 수사관, 판사, 배심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가, 경찰과 검찰의 허위자백 강요가 무고한 사형수를 만들어낸 현실은 어찌할 것인가,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법부의 업무량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사형 여부가 판가름나는 현실은 사형을 통한 정의의 회복이란 불가능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2년간 그와 함께 사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사형 존치론자에서 폐지론자로 돌아섰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기다리는 사람은 58명이다. 여론의 항배에 따라 이들의 생명도 깜짝거린다. 흉악범에 대한 도덕적 분노와 사형제도의 반인간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곱씹어볼 것을 권한다.

<기사 처음으로>

'기업'의 이면을 들추는 영화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시각 돋보여

올해 인권영화제에 소개되어 주목을 받은 영화 <기업, The Corporation>이 배급된다. 이 작품은 이윤추구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눈에 띄는 모든 것이 사유화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를 반추한다. 조엘 바칸의 저서 『기업』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기업의 탄생, 내부 작동 원리, 그 영향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다각도로 진단하면서, 자본의 힘으로 사람들의 오감과 정체성을 마비시키려는 기업의 특성을 들추어낸다.

유무형의 물질은 물론, 심지어 생일축하노래와 생명체까지 사유화의 축수를 뺏치는 기업의 이윤 창출 전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고품 우유나 인체에 해로운 제조제를 생산해 내는 몬샌토, 나치와 모종의 협력 관계를 맺으며 파시즘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IBM, 제3세계 어린이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다국적 기업들, 나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허구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술한 브랜드의 수만 큼이나 기업이 행해온 방대한 인권 탄압의 사례들 역시 영화 속에서 끝없이 소개된다.

감독은 미끈한 물질 세계의 표면 아래 감춰진 무수한 사례들을 그저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각종 광고물, 영화와 주류 미디어의 뉴스 조각 등으로 구성된 다채로우면서도 시의적절한 자료화면과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돋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만들어 냈다. 아울러 기업을 둘러싼 노암 촘스키, 마이클 무어와 같은 진보적인 사들의 정연한 논리와 대적점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전횡적 총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인터뷰를 알맞게 배치해 우파 인사들의 모순된 언행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영화는 상품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무더지기 쉬운 감각의 축수를 예민하게 만들어 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보는 이에게 그저 무기력하게 나앉지 말고, 자본주의의 '빈 구멍'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볼리비아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의 경험을 빌어 "몽치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신화화된 자본의 힘에 둘러 쌓여 있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새삼 상기시킨다.

<기업>은 8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배급합니다. (문의: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총련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재욱 씨는 2002년 연세대학교 공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3년 11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다. 정 씨는 "밖에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준비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폐지와 개정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지금의 대다수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 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며 "동성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하더라도 사회관념상이나 가족 질서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동성애자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성결혼과 입양,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과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해,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회관념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게 동성애자단체들의 비판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와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7월 31일 (토)

제 26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해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2.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3.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북은 "체제를 허물어 보려는 최대의 적대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국 조치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은 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 최소 1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배고픔, 체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해당국에 있는 동안 잠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면서, 생존권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도 송환되는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기획 탈북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수의 '기획탈북'으로 인해 중국내 탈북자 감시가 더 강화되고, 대다수 탈북자들은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을 보며, 기뻐할 수만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정착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낯선 사회에서의 문화적 충격,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하등 인간 취급하는 인식 등 탈북자들에게겐 모두 힘든 장벽이다. 때문에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지원 대책만큼이나 탈북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북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외 탈북자들도 자발적 귀환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과 동시에 북이 경제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탈북자들의 대거 입국은 재외 탈북자와 한반도의 남북 민중들이 함께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해법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 차별·범죄시화 우려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월말부터 이민, 비이민에 상관없이 미국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

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대조작업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테러를 예방하는데도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전자지문, 생체여권 등 생체정보의 확장은 오히려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 역시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뿐이다. 결국 미국을 요새화 하여 테러를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실상 테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테러 방지는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 방문객들의 지문과 사진을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US-VISIT'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양쪽 검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후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여부를 검사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전자지문을 찍어야 하는 상황. 미국은 10월 24일 이후에는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에게도 미국에 입국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지문 스캔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1. 인권침해 가해·동조자들의 발악 ...그래도 '과거청산'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장기수 옥사사건(7/1)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간첩·빨치산'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7/2) 또한 장기수 옥사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7/6) 허원근 사건 관련 국방부 특조단이었던 현역군인이 소장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문사 위 조사관에게 총기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7/12) 의문사위와 국방부 간에 '총기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사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역사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29)

2. 국가보안법 폐지,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 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7/20) 이후 한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도보순례에 나섰다.(7/22)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두을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고등법원은 "송두을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7/21)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KT가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감시한 사실이 KT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빚뚝했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에 들어갔다. 위치추적을 계속해온 휴대전화의 소유인이 사망자 인점, 위치추적 발신지가 대부분 삼성 SDI 수원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으로 삼성에 대한 의혹이 증가하는 가운데(7/13), 일주일 후 삼성 노동자들의 위치추적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7/22)

4. '파병반대' 시국선언, 단식농성, 도보순례 ...파병은 미친 짓

서울에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평화대행진이 진행됐고(7/10), 부산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진행됐다.(7/12)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국회의원 20여 명은 파병반대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7/13) 임시국회 마지막 날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7/14),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은 단식에 돌입했고(7/23),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열린시민공원에서 10만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전쟁피해자들은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전국도보행진을 시작(7/24), 서울에 도착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7/31)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